

필리핀, 인프라개발 확대 계획과 시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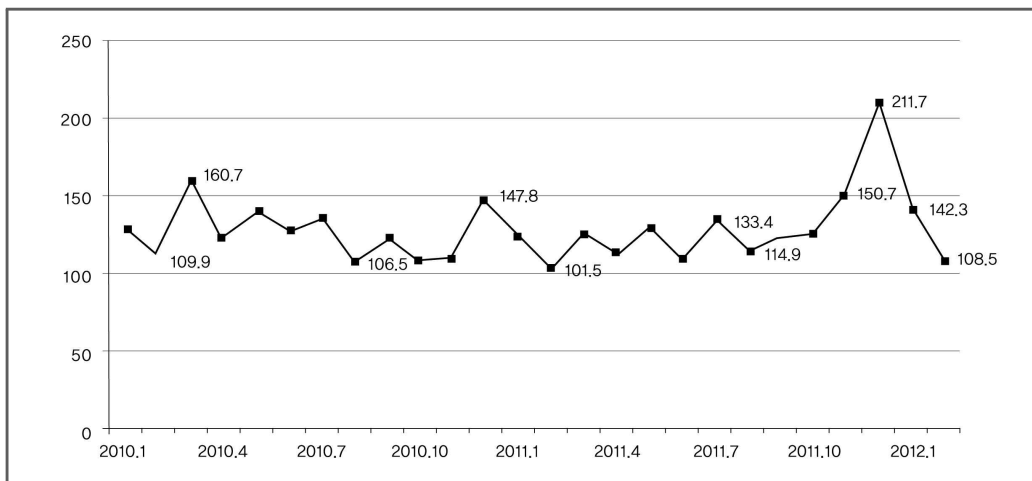
1. 재정수지 적자폭 감소에 따른 정부지출 확대

□ 2011년 중 정부지출 저조

- 필리핀 정부는 2011년 중 예정보다 1,536억 페소 감소한 16조 페소를 지출하였으며, 이에 따라 재정적자 규모는 당초 예상했던 3,000억 페소에 크게 못 미치는 1,978억 페소(약 46억 달러)를 기록하여 GDP 대비 적자규모가 2010년 3.5%에서 2%로 크게 감소함.¹⁾

<그림> 필리핀 정부 재정지출 추이

단위: 십억 페소



자료: 필리핀 통계청.

1) 필리핀은 취약한 세수기반 및 세무행정능력 미흡에 따른 낮은 세수입과 지역 표심 획득을 위한 정부의 선심성 예산 지출로 1998년부터 지속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해 왔음.



- 이는 2010년 5월부터 집권을 시작한 베니그노 아키노 정부가 지출 감소를 통한 재정수지 적자 축소에 역점을 두에 따라 이전 정권에서 승인된 프로젝트들이 취소된 것에 기인함.
- 또한 정부의 주력 경제정책인 민관협력사업(Public-Private Partnership: PPP)이 민간 부문의 참여 저조로 활성화되지 못하여 인프라 사업 관련 정부 지출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였음.
- 재정적자 규모의 감소는 정부의 재정건전성 개선에는 긍정적이나, 인프라 구축 지연 및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의 불충분한 제공을 야기하여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.
- 정부는 뒤늦게 이를 인식하여 2011년 12월 중 한 달 지출 규모 중 최대인 2,117억 페소를 지출하였음.

□ 2012년 인프라 부문 지출 확대로 재정수지 적자 규모 확대 전망

- 정부는 2012년 정부지출 증가를 통해 재정수지 적자 목표수준을 2,860억 페소(GDP 대비 2.6%)로 설정하였으며, 이에 따라 2012년 1월과 2월 중 정부지출은 전년동월 대비 각각 16.2%, 6.9% 증가하였음.
- 2012년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2.6%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, 2016년까지 2%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.
- 특히, 민간 부문 참여 유도를 통해 민관협력사업을 확대하여 대규모 인프라 부문 지출을 계획하고 있으며, 2012년 중 17개 사업을 발굴하여 그 중 8개는 6월까지 입찰을 실시할 계획임.

2. 정부의 인프라개발 사업 확대방안

□ 필리핀 인프라개발 관련 제도

- BOT(Build-Operate-Transfer)²⁾ 사업 및 민관협력사업(PPP)은 필리핀 투자청이 매년 발표하는 투자유치 우선분야 내 중점사업에 꾸준히 포함되어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됨.

2) BOT(Build-Operate-Transfer) 방식은 민간부문이 자비로 인프라 등 해당 시설을 건설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한 뒤에 국영기관에 이전하는 형태임.



- 필리핀은 1990년에 동남아 국가 중 최초로 민자 방식의 인프라 개발 관련 BOT법을 제정하여 추진해 왔으며, BOT 방식에 따른 인프라 개발사업의 경우 외국인의 지분 보유가 개발 단계에서는 100%, 운영 단계에서는 40%까지 허용됨.
- 민관협력사업(PPP) 역시 BOT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으며, 추진 재원으로 국내 및 국외 민간 부문과 정부의 자금이 동시에 활용됨.
- 그러나 위의 두 제도에 대한 일관된 기획 및 수행기관이 없고, 특정 인프라 사업의 경우 부문별로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거나 최대 25% 지분 취득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음.
- 또한 사업 계획단계부터 승인까지 이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비효율성이 존재하고 사업 추진에도 불투명성이 존재함에 따라 절차 간소화 및 정책 수행에 일관성 제고 등이 필요함.

□ 2012년 중 주요 인프라개발 확대 전망

- 필리핀 예산관리부(Department of Budget Management)는 2012년 전체 인프라 관련 예산 중 약 78%를 연초에 집행할 계획임.
- 도로, 철도 등 운송 부문과 수자원공급, 산사태 방지설비 등의 부문이 포함되며, 이중 일부는 이미 입찰이 실시되어 사업자 선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짐.
- 또한 사업개발 및 감시기구(Project Development and Monitoring Facility: PDMF)³⁾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인프라 개발 속도를 더욱 높일 계획임.
- 민관협력사업의 전담 부처인 PPP센터는 2011년 중 승인 완료된 10개의 사업에 더하여 2012년 중 신규로 8~16개의 민관협력사업(약 19억~33억 달러 규모)에 대한 입찰을 실시할 예정임.
- 2011년에는 민관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정책 마련으로 실제 사업 수행이 지연되었으나, 2012년부터는 추진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됨.

3) 사업개발 및 감시기구(PDMF)는 주로 민관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구로, 사업타당성 조사 비용 지원 등 사업 초기 지원이 주목적임.



3. 시사점

□ 우리 기업의 인프라개발 사업 참여기회 확대

- 아키노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강조해 온 민관협력사업을 통한 인프라개발 확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향후 인프라개발 사업에 대한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.
 - 필리핀 정부는 외국인투자자 유치를 위해 법률 및 수익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할 통한 제도적 리스크 해소와 사업타당성 조사비용 지원을 통한 초기비용 감소를 유도하고 있음.
 - 또한 다자개발은행(Multilateral Development Bank: MDB)으로부터의 장기 투자재원 유치를 통한 안정성 제고, 성장에 필수적이거나 수익률이 낮은 사업에 대한 세금 감면 등 금전적 유인 제공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.
- 관련 제도와 시장 정보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일본, 미국 및 유럽 주요국 기업에 비해 우리 기업의 참여는 저조한 편임.
- 사업 참여 관련 사업자 자격 요건과 입찰 및 선정 과정, 관련 법 및 시행령 등에 대한 현지정보 확보를 통해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인프라개발 부문에 대한 진출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.

【이 순 재】